

‘매일 확진자 나오는데 정보는 깜깜’ 불안

영암군, 일부 문자전송 안되고 보건소 전화는 불통 동선 등 인터넷 공개...고령자 많은 농촌에 안 맞아

전남 영암에서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지역이 확산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데다 정보 전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영암에서는 4명(전남673번~전남67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고구마농장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암에서는 지난 14일 관음사에서 3명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6일만에 4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삼호읍 사찰 관음사발(發) 코로나19 확진은 영암읍과 도포·학산·덕진면 등 지역내 뿐만 아니라 강진과 광주에 이어 나주와 목포까지 확산되고 있

다.

확진자도 사찰 스님은 물론 신도, 마을주민, 어린이집 원생,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감염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관음사에 머문 서울 금천구370번과 접촉으로 추정했으나 불분명하다.

금천구370번도 관음사에 머물고 있던 지난 10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구마 농장발(發)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으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마산가지다.

또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유선전화로 알아볼려 하지만 대다수 연결되지 않아 속을 태울 수 밖에 없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확진자 정보 등은 휴대폰 문자와 동네 이장의 안내방송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문자정보는 발송되지 않고 있다.

발송된다 하더라도 숫자로만 전달돼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렵다. 너무 늦거나 정확하지 않다.

또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유선전화로 알아볼려 하지만 대다수 연결되지 않아 속을 태울 수 밖에 없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한 주민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대부분인 나이드신 어른들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 전달 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응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상황 전파 등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대학교,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 결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대 2021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은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1,653천원, 자연계열 1,998천원, 공학계열 2,163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순천대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13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 특히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년 동안은 등록금을 연속 인하하였다.

또 2018학년도부터는 학부 신입생들의 입학금까지 폐지하였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대학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그럼에도 경상적 경비 절감과 정부재정지원사업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학생 역량 강화, 지역 상생협력 활동 등을 통해 재정 위기를 타파하고, 국립대학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재산다툼’ 동생 흥기로 찢른 형, 2심도 징역 5년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동생을 흥기로 찢르려 하거나, 또 다른 남동생에게 2년7개월 동안 협박성 문자를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지역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4시25분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 C씨에게 ‘해쳐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12월23일까지 총 33차례의 협박성 문자를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가 하면 재산분배 과정에 C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큰절하고 흥삼주고...’ 농협조합장 후보 2심도 벌금형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흥삼 제품을 건네는가 하면, 화상 메시지 전송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과거에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 금품을 제공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7월18일 광주의 농협 조합원 B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큰절을 하고,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B씨에게 흥삼 제품을 건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또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흥삼 제품·과일·영양제 등 98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3월1일 오후 6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포함한 화상 메시지를 조합원 1544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영암 학산면사무소 폐쇄...사적모임 주민 과태료 부과

전남 영암군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면사무소와 군청 일부 부서를 임시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을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영암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지역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한 건설업자 부녀 등 3명이 이날 오전 추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 부녀는 679번, 680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아버지가 기존에

확진됐던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교사 남편도 건설업 종사자다.

또 영암군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을 이용했던 전북 거주자 1명(681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했던 중

업원이 감염됐다.

특히 681번 확진자도 학산면 내에서 건설공사 관련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이용자 4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했다.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의 경우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사무소와 군청 일부 부서를 임시 폐쇄했으며,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법원은 고유정보보다 전 남편의 증언 더 신뢰했다

고유성이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전 남편 무죄 선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의붓아들 친부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일 제2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으로 불만을 행위가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주장처럼)

법원은 고유정보보다 전 남편의 증언 더 신뢰했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의붓아들 친부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일 제2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